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인력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 중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변경명령에 따라 실시계획 중 물적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잘못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의약품생산업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甲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ㄴ.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감염병 연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ㄷ. 일본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51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ㄹ.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방송업체에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②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에 관한 권한
④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한 비축명령에 관한 권한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업체에 대한 소관 부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다.
②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을 명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자의 소유자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주무부장관의 비축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면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비축대상물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甲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A 방송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고, 지정 당시 甲은 인력의 참여 협력에 문서로 동의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방송사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도 甲에게 참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A 방송사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④ 甲이 협력 요청에 따라 3일간 인력의 참여 협력을 한 경우 甲에게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을 발령한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도상훈련의 경우에 연(年) 10일간 훈련이 가능하다.
③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정부연습은 [(가)]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나)]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다)]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라)]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훈련이 면제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단, 훈련실시대상 인력임을 전제로 함)

> 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ㄴ.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ㄷ.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 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훈련대상물자 중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훈련이 끝난 당시의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문 13. 다음 사례에서 ㉠ ~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자기 A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B 병원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 甲과 간호사 乙, 丙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2021. 5. 14.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때 훈련실시명령은 B 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하였다.
>
>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되자, ㉡ A 광역시의 시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2021. 5. 8. B 병원의 장 丁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였다. 이후 丁은 인력훈련통지서를 甲과 乙, 丙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인 2021. 5. 14.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 丙은 현재 국외여행 중임을 이유로 해당 훈련에 참가할 수 없음을 丁에게 신고한 후 해당 훈련에 불참하였다.
>
> 훈련실시일에 甲과 乙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였고, 훈련에 제출된 의료기기가 훈련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丁은 이를 보상받고자 2021. 6. 10.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한편, 甲과 乙에게 훈련 당일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서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분과위원장이 된다.

ㄹ. 중앙민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읍·면·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부 집행 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문 17. A시의 시장 甲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이 아닌 X건물(「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乙에 대해 민방위 계획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설치의 민방위 준비를 명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의 민방위 준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ㄴ. 甲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X건물의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ㄷ.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 경우 흰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빨간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ㄹ. 甲은 민방위 준비에 따라 X건물에 설치한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A 군 B 면의 관내에는 통·리 민방위대(X)와 직장 민방위대(Y 및 Z)가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Y를 둔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Y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재 X의 대장이 심신 허약으로 인해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를 X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③ A 군의 군수는 같은 건물 안에 편성되어 있는 Z를 Y와 함께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그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B 면의 면장이 X와 인접한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조직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 민방위대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그 지원서를 거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③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ㄴ.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ㄷ. 중앙관서의 장이 「민방위기본법」이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ㄹ.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및 복구조치로서 피해시설을 응급복구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허용되는 사무가 아닌 것은?

① 주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무
②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③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전지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대요원 또는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6개가 있는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도지사의 민방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ㄴ.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ㄷ. 「하천법」에 따른 댐의 관리자는 그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
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은 해당 읍에서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이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관할 읍·면·동장은 의료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구청장이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교육을 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위탁자인 구청장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보충교육훈련 통지서 제외)를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과 요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	피난유도등·화재경보등	피난유도등	평상시와 같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특수시설 옥내등	공장의 수위실의 등화	소등	소등
㉢	철도관계등화	신호등류 중 정차장 진입등 및 진출등	소등	소등
㉣	항공관계등화	항공기등류 중 실내등	소등 또는 차광	소등

① ㉠, ㉡ ② ㉠, ㉣
③ ㉡, ㉢ ④ ㉢, ㉣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도 B시의 민방위 대원인 甲, 乙, 丙에게 동원을 명하였다.

<보 기>

ㄱ. 동원 기간 중에 甲의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A도의 도지사는 甲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ㄴ. 乙이 자신 소유의 중장비를 동원에 사용하여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ㄷ. 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면 가중 및 감경사유가 없는 한 B시의 시장은 丙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상 예비군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변 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ㄴ. 무장공비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ㄷ. 무장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의 무장 소요 진압
ㄹ. 무장 소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무기고의 경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7. 해안 지역에 위치한 A시 B동은 무장공비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고 있다. 예비군법령상 지역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동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ㄴ. 지원하여 B동 예비군 중대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ㄷ. B동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이 지난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ㄹ. 국방부장관은 B동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B동 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B동 특전예비군중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에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직장 단위 편성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광역시의 다른 구에 있으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문 29. 무장공비가 침투한 A시에 있는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예비군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시 관할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예비군지역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시에 있는 예비군대원에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A시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보류원서를 제출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인 B시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30.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가)]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 ○ 국방부장관은 [(나)]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다)]일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라)]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160	항공교통관제사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②	150	경찰관	5	소집통지서의 전달
③	160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5	전자문서 전달
④	150	외국에 여행 중인 사람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문 31.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이 출동하여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은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때에 예비군이 출동하지 아니하고는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에 그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④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문 32.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1. 2. 1. 무장폭도가 강원도 A지역에 있는 민가에 침입하였다.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乙 소유의 주택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을 1억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乙에게 발급하였다.

① 甲은 그 조치 내용을 즉시 수임군부대의 장 및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강원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2021. 3. 10. 乙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2021. 5. 10.까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乙에게 보내야 한다.
④ 乙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2021. 3. 31. 받은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2021. 4. 30.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3.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甲은 그 부상으로 인해 1개월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 甲의 유족으로는 乙만이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에게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공제한다.
> ㄴ. 乙은 보상 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구분된다.
> ㄷ.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의 사망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3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은 2021. 3. 10. 수탁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甲은 불가피하게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지급 없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甲은 민간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바람에 5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2020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임)

① 甲은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甲에 대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③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보상금은 400만 원이다.

④ 甲이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수탁경찰서장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35. 수탁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수탁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을 해제한 경우
> ㄴ. 소속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ㄷ.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한 경우
> ㄹ.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속 예비군대원에 대해 3일을 초과하여 민간의료시설에서 계속 치료하도록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36. 예비군대원인 甲은 예비군법령에 따라 소집되어 1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② 甲의 사용자가 甲이 훈련받은 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무로 처리한 경우 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甲에게 소집기간 중 예비군 업무 대신 자신의 개인적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지휘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 甲에게는 훈련 소집 기간에 「병역법」에 규정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않는다.

문 37. 예비군법령상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뿐만 아니라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2021. 6. 14.부터 2021. 6. 17.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A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B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2021. 6. 4.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B가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B가 부담하나, 만일 B가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면 甲이 부담할 수 있다.

③ A의 장과 B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결과를 2021. 6. 30.까지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甲은 재난대비훈련 평가의 결과를 2021. 7. 20.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 ~ 丁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甲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이어 다음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丙이다.
○ 丁은 화재·위험물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

<보 기>

ㄱ. 甲은 해외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ㄴ. 乙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의 결과를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丙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에 한정함)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되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乙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ㄹ. 丁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되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재난협력실장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임무수행에 관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④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한 수시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의 선포 대상이 되는 재난에서 제외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은 사회재난을 제외한 자연재난을 말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재난의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계경보를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를 실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인접 지역에서 인명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구역 내 민간기관의 장에게 장비 등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민간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여 재산피해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기 전에 미리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발령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헬기운항통제기관의 운항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헬기 운항 후에는 지체 없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50. A도 B군에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B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그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B군의 군수는 군(郡)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군의 군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피해상황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ㄴ.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 수송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ㄷ.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의 장에게 인력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ㄹ. 군대책본부의 본부장인 B군의 군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